

현장활동 호평...감시·견제 기대 못 미쳐

전남도의회 2008 의정 결산

전남도의회가 지난 23일 237회 정례회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확정했으며, 전남도 한옥지원조례 등 18건의 조례안과 국가균형특별법 개정 반대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건의·결의안을 비롯해 총 29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올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과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의 역할이 다소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을 받아 아쉬움을 남겼다.

도의회는 올해 115일간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 93건, 동의·승인안 5건, 건의·결의안 26건, 예산·결산안 10건, 규칙 2건 등 모두 145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12건, 주의 6건, 개선 71건, 권고 135건, 건의 11건 등 모두 235건을 관련 부서에 하여금 처리토록 했다.

도의회는 또 '2010 F1자동차경주대회 지원특별위원회'와 '광주·전남



전남도의회(의장 박인환)는 지난 23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을 끝으로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한·미FTA 국회비준 상정 규탄 졸속처리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례안 93건, 건의·결의안 26건 등 145건 의안 처리

F1자동차대회·혁신도시 특위 구성, 현안사업 지원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전남도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또 지방자치연구회와 문화정책연구회, 농어촌발전연구회, 실버정책연구회 등 각종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전남도정에극복상조례안과 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제정, 지역 장애인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특히 지방의회로서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해 상경, 미 쇠고기 장관고시 철회

와 재협상을 촉구하며 삭발시위를 가졌으며, '농자재값 폭등에 따른 공공비축미 매입가 인상 등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의회는 그러나 도정질의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전남도의 행정과 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과 지적을 하는데 그쳐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지방행정체제 개편...내년 '핫 이슈'로

정치권 논의 본격화...여야 이견 난제 산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내년 핫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8월 정치권에서 촉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밑그림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정치권에 주문하면서 본격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현재 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내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8월 현행

지방 행정체제를 70여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개편안을 꺼내들어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불을 댕겼다.

한나라당도 이 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원칙적인 공감 의사를 밝히면서 개편 논의에 가세했다. 권경석 의원은 광역 시·도 체제를 유지하되 230개 시·군·구를 50~60개의 통합 시·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 10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넣은 데 이어 22일 열린 대통령

령 업무보고에서 새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나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가 성과를 내는 쪽으로 발전하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세로 형성돼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의원들 간에도 광역 자치단체의 존치 여부나 기초자치단체 통·폐합 구역,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대상 등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m@

야 문화도시 조성추진, 26~27일 워크숍

옛 도청 별관 등 현안 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위원장 최 협)는 제3기 조성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6일~27일까지 이틀간 워크숍을 개최한다.

24일 조성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

에는 제3기 민간 조성위원 15명이 참석, 옛 도청 별관 문제를 포함한 조성위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임낙평 위원은 '조성위원회 3기의 역할과 과제', 시설 분야 전문가인 조인숙 위원은 '창의 문화도시'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이병훈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양홍석 문화도시정책과장 등도 참석해 문화전당 건립공사 현황과 옛 도청 별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유해영 단국대 교수와 김종식(전)시네마이 사장 등 2명을 조성위원으로 위촉, 전체 조성위원 28명(민간 15명, 당연직 13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李 대통령 '속도전'에 취미생활도 중단

부처 업무보고 연내 마무리·라디오 연설 등 분주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승부수를 던져야 할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연말 '속도전'에 나서면서 최근 개인 취미생활도 대부분 접은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면서 "사전 보고와 후속대책 논의 등으로 사실상 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어 26일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 27일 교육과학기술부 등 2개 부처, 29일 법무부 등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또

30일은 공공기관, 31일은 외교교통상부 등 3개 부처로부터 각각 보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일요일인 오는 28일에도 올해 마지막 라디오연설 녹음을 해야 하는 등 '휴일없는 연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살인적' 일정이 계속되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수개월동안 평소 즐겨하던 주말 테니스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겨울철 무리한 운동이 좋지 않다는 주위의 권고와 함께 3개월여전 어깨에 가버린 부상을 입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신 주말에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청와대 뒷산을

오르며 잠깐씩 여유의 시간을 갖고 있으나 워낙 바쁜 일정 때문에 최근에는 영화 감상, 독서 등의 시간도 많이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런 '속도전'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하와이에서 무려 12일간 휴가를 보내기로 하면서 이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참모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여유를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면서 "더욱이 이 대통령이 연말 며칠간 휴가를 간다고 했을 경우 과연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종교적 대체 복무제' 백지화되나

국방부 설문 "국민 68%가 반대...수용 불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 논란이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연세준 최종 결론을 내릴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작년 9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병의 2배인 36개 일간 한센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근무를 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뒤집고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래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대체복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다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

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언제 결정하겠다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국민여론을 감안해 정책적인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로서는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결정은 여론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되면 '병역 형평성'과 '복무 병사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등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어 사실상 대체복무가 백지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론조사에 반영된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최종결정을 미루는 국방부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이 최근 대전대학교의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종교적 사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1%(1천365명)가 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예외없는 병역의무(43.1%) ▲군의 사기저하(22.4%) ▲병역거부 조정(13.1%)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12%) ▲남북대치 상황(7.4%)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지난 10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국회의원(51명)과 변호사(30명), 교수(99명), 기자(109명), 종교인(263명) 등 총 5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5.5%가 대체복무에 동의한다는 반대 결과가 도출됐다.

국민을 상대로한 병무청의 설문 조사와 공청회 계획은 내년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대체복무 허용 여부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손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의·치의학/약학

전문대학원 MDPass 의(醫)학원

진학전문교육기관 개강 1월 2일

서울유명학원 전문강사진 전격출강!

임상수업 김영민 교수 신경내과 전문의	임상수업 황세현 교수 신경외과 전문의	유기화학 최문정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일반물리 박종기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영어수업 장영문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이전 MDPass 서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을 들이신 예비 대학원생들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 대학교 재학생인 학생 ▶ 대학교 재학생에게도 장학금 지급 ▶ 국립대학 재학생에게도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지원할 기관별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대 : 홈페이지(www.jnu.ac.kr)에서 지원 ▶ 조선대 : 홈페이지(www.cnu.ac.kr)에서 지원 ▶ 전북대 : 홈페이지(www.jpu.ac.kr)에서 지원
---	--

MDPass 醫학원

문의 263-5453 (박구정 맞은편) | 전화 255-9119 (전북대병원 앞)

서울고시학원

문의 514-4560